

태아 산재 인정 ‘하늘의 별따기’… 입증 부담에 신청조차 막막

태아 산재 신청 12건 중 7건 승인
지난해 직장가입자 유산·사산 6만건
유산·사산·조산 산재 신청 5년간 12건
입증부담·유해인자 범위 개선 촉구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된 노동자의 자녀가 산재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 관련성 입증과 산재 신청에 따르는 부담, 제한적인 유해인자 범위 등이 산재 신청 및 인정에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김포시갑)이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아 19일 발표한 ‘태아 산재 등 현황 관련’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한 건강손상자녀의 최초 요양신청은 12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이 승인됐다. 연도별 승인 건수는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2건, 올해 7월까지 1건이다. 위 통계는 최초요양신청서의 1회 차 처리 기준이며, 사고나 출퇴근 재해 없이 모두 질병 사례다.

◆태아 산재 신청 12건 중 7건 승인… 입증·신청 장벽 여전



A씨 전시장 운영기획·서비스 매니저. 임신34주 출산.



B씨 대형마트 상품 발주·진열·재고 관리. 임신27주 출산·출생체중 1,142g. /Chat GPT 생성이미지

산재 승인 사례의 주요 진단명은 2023년 무뇌아양증, 2024년 면역글로불린A 신증(IgA 신증)과 선천성 무신장증·거대결장증이었다. 지난해에는 출생 당시 체중이 각각 1750~1999그램(g), 1000~1249g인 저체중 출산아 사례가, 올해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사례가 승인됐다.

반도체 노동자 자녀의 질병을 인정하는 과정에서는 조사 단계와 최종 심의의 판단이 달라지기도 했다. IgA 신증 등을 앓는 자녀의 사례에서 역학조사는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

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신 기간 유해 작업환경에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해 자녀의 공팔무발생증과 방광요관역류를 인정하고, IgA 신증도 이들 질환에 따른 만성 염증 등의 영향으로 봤다.

◆직장가입자 유산·사산 지난해 약 6만건… 관련 산재 신청은 5년간 12건 불과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유산·사산은 약 6만건에 달했지만, 2022년부터 올해까지 처리된 유산·사산·조산 관련 산재 신청은 12건에 그쳤다. 전체 유산·사산을 업무상 재해로만 볼 수는 없지만, 산재 신청 및 인정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유산·사산 건수는 5만9878건으로, 같은 해 출산 건수 19만2243건의 31.1%에 해당했다. 출산 건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은 2022년 30.4%, 2023년 30.9%, 2024년 31.3%였다.

다만 이 비율은 전체 임신이 아닌 출산 건수 대비 유산·사산 건수를 나타낸다. 같은 사람이 한 해에 여러 차례 유산한 경우 각각 집계하며, 의료기관을 찾지 않거나 건강보험·의료급여로 청구되지 않은 사례는 빠져 실제 유산 규모보다 적게 집계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처리된 유산·사산·조산 관련 산재 신청은 12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이 승인됐다. 승인 사례에는 절박유산도 포함됐다. 전체 유산·사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 약 6만건에 이르는 발생 규모에 비춰볼 때 산재 신청과 인정 사례는 극히 드문 셈이다. 다만 올 4월 난임 치료를 위한 병가 사용과 관련해 회사 감사를 받은 뒤 계류유산(태아가 자궁 안에서 사망한 유산)을 겪은 노동자의 산재가 인정되기도 했다. 판정위는 감사에 따른 불안과 심

리적 부담, 이후 발생한 출혈, 검사 후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올 3월에는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검토한 바이오업체 연구원의 계류유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증 부담에 신청도 주저… 노동계 “유해인자 범위 넓혀야”

노동계는 피해를 겪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까지 나아가기 어렵게 하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업무와 건강 손상의 관련성을 당사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유산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개인적 요인을 들어 신청을 만류하거나 관련 자료 확보에 협조하지 않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 선임차장은 “시행령에 규정된 유해인자의 범위가 협소해 산재 인정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유해인자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며 “어렵게 도입된 태아 산재 제도가 보다 포괄적인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청년 고용 불안 속 통합 채무상담 체계 필요

▶▶ 1면 ‘다중채무에…’서 계속

산업별로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제조업의 청년 비율은 17.6% 줄어 들었다. 가장 큰 감소폭이다. 같은 기간 도매 및 소매업은 1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6%, 교육서비스업은 2.7% 각각 감소했다.

올해 1월 기준 15~29세 ‘쉬었음’ 청년

도 약 46만9000명으로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채무 상황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질적인 채무조정제도 필요

일각에서는 현행 채무조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한편, 통합 상담 체계 구축과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실질적인

청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원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채무조정제도 이용 전·중·후에 개입이 충분치 않다”고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의 상황과 부채 속성을 고려할 때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 종합 상담 창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 관리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솔리다임 IPO, 지분율 하락과 성장 효과 관건

▶▶ 1면 ‘기업가치 할인…’서 계속

솔리다임의 상장은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롭다. 공정거래법이 증손회사의 경우 지분율 100% 보유하도록 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 상장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제한은 해외 계열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SK하이닉스 주주들이 우려하는 것은

솔리다임의 성장 과실을 외부 투자자와 나누야 한다는 점이다.

블룸버그 산하 분석기관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IPO 조달 자금으로 생산 능력과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솔리다임의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지분율 하락에 따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우리사장님들 모두~ 잘됐으면 좋겠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복리 이자
목돈 마련



신속한
비대면 대출



공제금
압류 금지

홍보대사
김나희

홍보대사
탁재훈

KBIZ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심의필 제26-025호(2026.03.06 ~ 2027.03.01)

가입문의

1666-9988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